

2026. 10. 2.[금]

을지로위원회 사무국 : Tel 02-6788-3201, Fax 02-6788-3629

차도순 국장 / 오재현 선임비서관(민병덕 의원실) 02-784-9540

2026 을을 위한 국정감사 7대 과제 발표 기자회견

2026년 10월 2일 (금) 11:20,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2026년 을지로위원회 국정감사, ‘을(乙)’ 들의 가장 강한 무기가 되겠습니다’

‘을과 더불어, 언제나 을지로’, 더불어민주당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 위원장 민병덕입니다.
을지로위원회가 2026년 국정감사에서 아래 7개 분야 민생과제 해결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홈플러스 사태를 야기한 MBK 관련 사모펀드 규제·감독, 배달앱 수수료,
문화·택배·건설 분야의 불공정, 기술탈취, 공공기관의 거래 관행 등 7개 분야입니다.
이 민생과제를 국정감사에서 꼼꼼하게 살펴보고, 입법과 제도개선으로 이어가겠습니다.

〈MBK-홈플러스〉

첫 번째, MBK와 홈플러스 사태입니다.

사모펀드 MBK가 인수한 홈플러스는 지난해 2월 25일 전자단기사채 820억원 가량을 발행하고,
불과 일주일 뒤 기업회생을 신청했습니다. 노동자는 일자리를, 입점 점주와 납품업체는
생업과 물품대금을 걱정해야 했습니다. 전단체 투자자도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을지로위는 30만 민생이 걸린 이 문제를 1년 8개월 간 민생 최대현안으로 보고 계속 쟁겨왔습니다.

지난 9월 2일 회생계획이 인가돼 고비 하나는 넘겼습니다. 그러나 인가는 정상화의 시작입니다.
인가된 계획에 따르면 납품업체 물품대금 5,032억원 가운데 3,984억원, 약 80%의 변제가
2030년 2월로 미뤄져 있습니다. 점포 매각을 전제로 변제계획을 세웠지만, 매각가격이 예상보다 낮아
지면 미뤄진 대금을 갚을 재원에도 차질이 생길 수 있습니다.
점포를 팔아 빚을 갚는 것만으로 홈플러스가 정상 영업할 수 없습니다. 상품이 들어오고 노동자가
일할 수 있어야 하고 무엇보다 책임 있는 새 인수자도 찾을 수 있습니다.
홈플러스 정상화를 위한 명확한 책임 규명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MBK와 홈플러스 경영진은 전단체 발행 당시 회사 사정을 어디까지 알고 있었는지, 금융당국은 사모펀드의 인수 이후 경영 위험을 어떻게 감독했는지 확인하겠습니다. 정부가 회생계획의 변제·고용·점포 매각을 어떻게 점검하고, 정상화를 위한 인수·합병을 어떻게 지원할지도 묻겠습니다.

최근 검찰이 김병주 MBK 회장을 불기소 처분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납득할 수 없는 일입니다. 철저한 국정감사로 김병주 회장이 책임을 회피하는 일을 차단하겠습니다.

기업을 인수해 경영한 사모펀드가 위기의 부담을 노동자와 입점점주, 납품업체, 투자자에게 떠넘기는 일이 반복해서는 안 됩니다. 자본시장법 개정을 비롯해 사모펀드의 책임과 감독을 강화하는 입법과 제도개선을 이끌어내고, 홈플러스가 정상화되어 30만 민생의 생계가 지켜질 수 있도록 챙기겠습니다.

〈배달앱 불공정 분야〉

대한민국 600만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작년 한 해에만 100만 자영업자가 폐업한 데 이어 자영업 비중 20% 선도 사상 처음으로 무너졌습니다. 고용원 없는 '나홀로 사장'이 75%에 달하고 대다수가 만성적자의 늪에 빠져 있습니다.

위기의 이면에는 거대 플랫폼 기업의 기형적인 비용 전가 구조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무료배달' 마케팅 출혈 경쟁의 비용을 영세 입점업체에 고스란히 떠넘기고, 각종 수수료와 배달비, 광고비로 인해 입점업체 매출의 30~40% 이상이 플랫폼에 빠져나갑니다. 음식을 팔수록 적자인데 플랫폼은 막대한 영업이익을 챙기면서 갈등까지 조장합니다. 배달 지연과 오배송의 피해를 점주에게 전가해 악성 리뷰와 별점 테러를 감내하게 합니다. 선(先)환불 후 점주에게 무과실입증 책임까지 지우는 불공정 관행도 만연합니다. 자의적인 배달거리 제한으로 멀쩡한 매장의 온라인 영업권을 일방적으로 침해하고 있습니다.

배달의민족의 경우 수천억 원대 국외 배당과 경영자문료 등을 통한 역외탈세 의혹을 받습니다. 쿠팡은 공정위의 정당한 현장조사를 물리력으로 방해하며 공권력을 무력화했습니다. 이는 '자율규제'라는 허울 좋은 면죄부 아래 플랫폼의 횡포를 방조해 온 결과입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거대 플랫폼의 갑질과 탈세, 공권력 무력화 시도를 엄중히 따져 묻겠습니다. 최혜대우 요구, 자사우대, 끼워팔기 등 플랫폼의 시장교란 행위에 강력한 처분도 촉구하겠습니다. 총수수료 상한제를 도입하고 꿈수 배달비 전가와 일방적 약관 변경을 원천 차단하겠습니다.

가맹·대리점 본사의 배만 불리고 위험은 떠넘기는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겠습니다.
가맹본부는 과도한 필수품목과 차액가맹금, 일방적 판촉비 전가로 폭리를 취하고 있습니다.
대리점 분야 또한 판매목표 강제와 재고 떠넘기기, 유사대리점을 통한 법망 회피가 심각합니다.
국정감사를 통해 착취적 구조를 끊어내고 본사와 점주가 상생하는 거래 질서를 확립하겠습니다.

점주단체의 협의 요청에 본사가 응하도록 한 '가맹사업법'의 현장 안착을 끝까지 챙기겠습니다.
이번 국감을 통해 필수물품 범위를 제한해서 마진 폭리를 막는 대리점주를 위한 '대리점법 개정'의 동력을 확보하겠습니다.

〈문화산업 불공정 계약·신비아파트〉

‘신비아파트’ 완구사업을 둘러싼 CJ ENM과 중소 완구업체의 분쟁을 계기로,
문화콘텐츠 분야 계약 조건이 정해지고 이행되는 과정이 공정했는지 꼼꼼히 살펴보겠습니다.

중소 완구업체에 따르면 상품 개발과 선행 투자를 진행한 뒤 당초 제안받은 사업 조건이 달라졌고,
보증금과 광고비 부담이 커졌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반면 CJ ENM은 계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했
으며 업체가 약정금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약정금 청구 소송에서는 CJ ENM이 1심에서
승소했고, 업체 측은 항소한 상태입니다.

이번 사안의 핵심은 해당 계약이 실제로 불공정했는지입니다. 두 회사의 설명을 모두 듣고, 계약
체결 전후의 협의 자료와 실제 계약 내용을 대조하겠습니다. 선행 투자가 이뤄진 뒤 조건이 변경
됐는지, 변경 과정에서 실질적인 협상이 가능했는지, 보증금과 판매 위험은 어떻게 나뉘었는지
꼼꼼하게 확인하겠습니다. 계약에 포함된 ROS 광고 역시 비용 부담과 실제 집행 내역을 살펴보겠
습니다.

법원의 민사상 판단도 중요하지만 을지로위는 문화산업의 불공정 관행을 점검하겠습니다.
만약 불공정한 계약 조건이나 거래 행위가 있었다면 관계 기관에 조사와 시정을 요구하겠습니다.
이번 사례에 그치지 않고 콘텐츠 기업과 협력업체가 투자에 앞서 계약 조건과 위험을 충분히 확인
하고 협상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습니다.

〈기술탈취 분야〉

중소기업에게 기술은 곧 생존입니다.

수년간 인력과 자금을 투입해 개발한 기술이 침해되면 기업의 성장 기반과 존립까지 위협받을 수

있습니다. 피해기업이 직접 증거를 찾고 비용을 들여 긴 분쟁을 버텨야 하는 현실도 큰 문제입니다. 기술분쟁이 시작되는 순간 중소기업은 증거와 자금, 시간 모든 면에서 철저한 ‘을’의 위치에 놓입니다.

「2025년 중소기업 기술보호 수준 실태조사」에 따르면 중소기업 기술침해는 연간 589건으로 추정되고, 피해기업의 평균 피해액은 23억2천만원에 달합니다.

법적 구제도 쉽지 않습니다. 기술침해 민사사건 승소율은 32.9%에 그쳤고, 승소사건도 평균 7억9천만원을 청구해 1억4천만원만 인정됐습니다. 청구액의 17.5% 수준입니다.

기술을 지키기 위한 싸움이 기업의 존립을 위협해서는 안 됩니다. 분쟁이 길어질수록 중소기업은 경영과 투자에 집중하기 어렵고, 회복하기 힘든 타격이 누적될 수밖에 없습니다.

올해 국회는 전문가 사실조사와 자료보전명령 등을 담은 한국형 증거개시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그러나 시행은 2028년 2월부터입니다. 시행 전까지 피해기업의 증거 확보와 신속한 구제를 지원할 현실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을지로위원회는 인산가-씨디에스글로벌을 비롯한 6건의 기술분쟁 사례를 집중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왜 증거 확보가 어렵고 분쟁이 장기화되는지, 피해회복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따져보겠습니다.

손해액 산정과 피해회복, 기술탈취 제재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는지도 점검하겠습니다. 중소기업이 기술을 지키기 위해 기업의 존립까지 걸어야 하는 구조를 바꾸겠습니다.

〈불법·불공정 하도급 근절〉

건설현장의 안전한 공정은 실제 시공을 담당하는 업체가 정당한 대가를 받는 데서 시작합니다.

이번 국감에서 불법·불공정 하도급 실태와 발주기관의 관리·감독책임을 철저히 따져 묻겠습니다.

첫째, 소규모 전문공사는 전문건설업체가 직접 시공할 수 있도록 제도화해야 합니다.

의제부대공사 인정 범위를 확대하고, 공종별 전문성과 시공능력이 정당하게 평가받도록 전문건설업의 업무·영업 영역을 보호해야 합니다.

둘째, LH 유지보수공사의 발주·입찰·계약 전반을 점검해야 합니다.

전문업체의 참여를 가로막는 불합리한 조건을 개선하고, 적정 공사비와 합당한 보수 대가를 보장해 입주민의 주거 품질을 높여야 합니다.

셋째, 전문건설업 대업종화 역시 현장 전문성과 수주 기회에 미친 영향을 검증하고 재검토해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국토교통부와 LH에 구체적인 개선책과 이행 계획을 요구하겠습니다.
성실하게 시공하는 업체와 노동자가 정당하게 보상받는 건설현장을 만들겠습니다.

〈택배 노동자 과로사 및 야간·새벽배송 대책 관련〉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을지로위원회는 연간 200명이 넘는 노동자가 야간노동 중 숨지고, 사망자 수 1·2위 직종이 ‘운전·배달 종사자’라는 실태를 고발했습니다.

노동자의 목숨을 담보로 한 새벽배송을 지적하며 소비자 편익과 노동자 건강권의 상생 방안을 촉구했습니다.

그러나 ‘제3차 사회적 대화’는 기업들의 미온적 태도로 공전하고, 1·2차 합의조치 현장에서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쿠팡은 국민 앞에 약속한 ‘주 5일제 정착’, ‘분류작업 배제 및 투입 시 분류수당 지급’을 어기며 노동자들을 고강도 노동으로 내몰고 있습니다.

이런데도 야당은 쿠팡 관련 증인 채택을 거부하며 기업의 방패막이를 자처하고 있습니다. 현장 실태를 외면하고 기업의 꼼수에 동조하는 태도를 강력히 성토했습니다.

택배기사의 과로사를 막기 위해서는 ▲프레시백 회수 및 분류작업 완전 배제를 통한 노동강도 완화, ▲주 48시간 제한 및 4회 이상 연속 야간노동 시 필수 휴식 부여 등 실질적인 노동시간 제한과 휴식 보장이 시급합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이 문제를 집중 질의하고 점검하겠습니다.

을지로위원회는 멈춰 선 사회적 대화를 조속히 정상화하고,
야간근로 상한제 도입과 표준계약서 개정을 포함해
택배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권을 지키기 위한 입법과 제도개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공공기관 갑질 분야〉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는 이번 국정감사를 공공기관의 불공정거래를 바로잡는
‘을을 위한 국정감사’로 만들겠습니다.

공정한 거래를 선도해야 할 공공기관이 우월한 지위를 앞세워 대금 지급을 미루고,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거나 협력업체에 비용과 손실을 떠넘겨서는 안 됩니다. 현장의 피해사례를 바탕으로 책임을 묻고, 피해기업의 권리 회복을 촉구하겠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공공기관부터 불공정거래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모범거래모델을 도입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피해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모범거래모델의 이행 실태를 점검하고, 불공정행위와 시정 여부가 경영평가에 실질적으로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피해 중소기업이 장기간의 신고와 소송을 홀로 감당하는 구조도 바꾸겠습니다. 신속한 분쟁 해결과 피해구제를 위한 입법과 제도개선을 추진하겠습니다. 국정감사에서 확인한 문제를 끝까지 쟁겨,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정당한 대가를 받고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을지로위원회가 언제나 민생의 최선봉에 서겠습니다. ‘을과 더불어 언제나 을지로’ 그 약속을 지키겠습니다.

2026년 10월 2일

더불어민주당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 국회의원 일동

[참고] 기자회견 기획안

□ 취지

- 2026년 국정감사를 앞두고 MBK-홈플러스 사태와 사모펀드 규제·감독, 배달앱·가맹점·대리점 불공정, 문화산업 불공정 계약, 택배 노동자 과로사, 건설 불공정 하도급, 기술탈취, 공공기관 갑질 등 민생현안 해결을 위한 기자회견을 개최함.
- 을지로위는 위 민생과제를 올해 국정감사에서 집중적으로 다뤄 ‘을과 더불어, 언제나 을지로’ 라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임.

□ 개요

- 일시/장소 : 2026. 10. 2.(금) 11:20~11:40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주최: 을지로위원회 및 소속 국회의원 등
- 식순

시 간	주 제
11:20~11:22	기자회견 취지 설명 및 참석자 소개 (민병덕 위원장)
11:22~11:40 (책임의원 각 2분 30초 발언)	<기자회견문 낭독> 1. MBK-홈플러스 2. 배달앱 불공정 3. 문화산업 불공정 계약 4. 기술탈취 5. 불법·불공정 하도급 근절 6. 택배 노동자 과로사 및 야간·새벽배송 대책 관련 7. 공공기관 갑질
11:40	마무리